

#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담당	랄라 (다산인권센터 010-5608-0288)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제목	[취재요청]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 원칙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장소 및 일시	10월22일 오전 11시반,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 장소(양재역 엘타워 앞)/총11쪽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인권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회복은 인권중심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심해진 불평등과 방역을 명분으로 취해진 기본권의 제한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 없는 일상회복이어서 안됩니다.
3. 이에 25개의 인권단체로 이루어진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인권 중심의 일상회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10월 22일 오전 11시반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인권의 원칙과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와 불평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현실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백신패스 등에 대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토론회 장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원칙과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요약 등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인권중심의 일상회복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사회: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 인권중심의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인권중심의 전환 촉구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 집회시위 권리 보장 촉구  
: 박한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3. 백신패스 중단 촉구  
: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 4. 국제적인 백신불평등 해소를 위한 역할 촉구  
: 김선(민중건강운동(PHM)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 5. 코로나 불평등(백신불평등, 강제검사의 문제)의 현실 규탄 및 개선 촉구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 안형진 (홀리스행동 활동가)

**<덧붙임1> 주요 발언 내용**

**1. 인권중심의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촉구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코로나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나의 인권이 타인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 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도한 것은 코로나로 드러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일 것입니다. 공중보건위기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무조건적인 금지나 통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제보건기구도 천명했듯이 국가의 조치 인간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서 행정당국의 제재 조치는 불합리하거나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기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정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위드코로나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 중심이 된 일상회복이 아닌 차별이 심화된 일상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은 코로나를 명분으로 취해진 긴급조치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알 때, 당연히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당했던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지양하고 자의적 권력남용이 심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에 수없이 인권 침해 없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역조치를 제안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상회복의 중심을 소비진작, 상권 복원, 거리두기 완화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집단의 권리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 중심의 일상회복입니까. 주류중심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일상회복이 방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위드코로나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차별받고 고통 받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2. 집회시위 권리 보장 촉구 : 박한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희망법)**

거리두기 4단계 중 집회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고시는 집회에 관하여는 서울 전역에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의 전면 금지는 허가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할 수 있어 위헌 무효이다.

지난 9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서초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판시한 내용.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집회를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조치가 위헌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고 조정하면서도 집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며, 경찰은 기계적으로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모여서 말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국가와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더욱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명백히 드러난 차별의 구조 앞에서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받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집회만을 위협시키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틀어막는 조치는 방역에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가중시킨다.

11월부터 시행된다고 이야기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단지 식당에 가고 모임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광장에 모여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함께 모이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반드시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집회가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더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 집회를 보장할때 더 민주적인 방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 4. 백신패스 중단 촉구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하나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시민들은 일부 시설에 대한 입장을 위해서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사용하거나 신분증에 접종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패스가 본격화되면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 패스 형태로,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여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구분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참여 제한 조치는 미접종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백신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공식화해 접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정부는 백신접종률을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에만 급급하여 지금까지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남아있는지 살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백신접종률이 낮은 집단은 사회경제적 인권약자들이다. 여러 당사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들에게 백신접종을 위한 충분한 백신관련 정보, 백신접종 후 쉴 수 있는 거주 공간과 노동조건제공, 백신접종 접근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해왔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행정편의적인 접종계획을 시행하여 백신접종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백신패스의 도입은 사회적 약자들이 백신접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불평등과 차별 개선을 도외시한 채, 이들이 백신접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낙인을 부과하는 일이 될 뿐이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변이바이러스나 돌파감염으로 인한 유행의 지속에서 보듯이,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백신접종률 70%만 달성된다고 쉽게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의 제재적 정책은 그 자체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금지해야 한다고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다.

백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인류의 지식은 부족한데, 겨우할수 있는수단이백신접종을하지않은사람에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뿐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상 회복은 누구도 빠트리지 않고 모두 함께, 그리고 이전과 같은 일상이 아니라 코로나로 드러난 불평등한 삶의 일상이 더 낮게 살만한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목표삼아야 할 것이다.

## 5. 국제적인 백신불평등 해소를 위한 역할 촉구: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현재의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은, 특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제약산업과 그를 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죽도록 내버려 뒀도 좋은 생명은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의료진조차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 첫 인구집단 면역'을 선언하고, 미국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수 35만 명, 하루 사망자수 2천 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이라고 하는 인도에서조차 백신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자국민 우선접종을 위해 백신 수출을 중단하자, 코백스(COVAX)를 포함해 전 세계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백신 도입 일정 역시 늦춰졌고, 물량도 축소됐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혈청연구소(SII)는 미국의 원재료 수출 중단으로 백신 생산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원재료 수출 중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개발생산(CDMO)하기로 한 백신의 생산일정에도 차질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국 정부는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모두 합해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없는 추가계약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신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에이즈(UNAIDS) 등 여러 유엔기구들과 함께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일찌감치 찬성해 왔습니다.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백신 생산에 관련된 특허 독점권을 일시중단하고,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기술이전에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이 처음 제안된 것이 작년 10월 초이니, 현재의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은, 특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제약산업과 그를 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재난인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국제사회는 하루라도 빨리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뒷북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 결의안을 당장 통과시키고, 정부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에는 유례없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허 독점권 중단은 한국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 6. 장애인차별의 일상 회복은 아니어야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만 재난시대에서 그 차별과 배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병원 접근성부터 차별의 시작입니다. 코로나 검사부터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지원, 백신 접종까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에 비해 두세배가 큽니다.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자가격리와 치료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려곡절 끝에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사 동반이 가능하지만 확진자 병원 입원 시 여전히 감염병법 등의 기준에 의해 활동지원사 동반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간호 외 일상지원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일부장애유형은 우선접종 대상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은 전 국민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냥 백신 접종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여전히 이동이 어려운 와상장애인 등 백신미접종 중증장애인에 대책은 전무합니다. 감염병 시대에 집단시설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되었습니다.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탈시설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7. 백신조차 받지 못하는 이주민 차별의 일상: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코로나19 초기부터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등 소외계층이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위원회 그 어느 분과도 코로나19 이후 방역 과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진 이주민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심히 유감이다.

그간 코로나인권대응네트워크는 청와대 방역기획관과 중부분 인권보호팀을 통해 취약계층방역대책을 촉구해 왔다. 그 중 이주민 관련해서 차별적 행정명령 문제점 개선과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백신 셔틀, 주거와 노동조건 개선, 미등록자 합법화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현재까지 외국인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 접종률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9월 26일 기준으로, 주간 10만 명 중 외국인 발생률은 내국인 대비 약 9배 높은 가운데, 내국인 대비 외국인 접종률은 1차 6.7%p, 2차 23.5%p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등록외국인에 비해 미등록자 접종률은 11.5%p 낮아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들에 방역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반응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외국인 확진자 증가세와 달리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를 풀어보고자 부랴부랴 내놓는 방안들은 이주민 현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안이하다. 공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들을 보면 낮 12시~오후 1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노동 조건상 가장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시간에는 휴무를 취할 정도로 이주민 방역 현장이 여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방역당국이 이주민 백신 접종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야간과 휴일에도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기는 출입국도 마찬가지다. 출입국은 미등록자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미등록자에게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유예를 하고 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방역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다. 출입국은 작년 자진출국자 재입국 약속도 안 지키고 있어 미등록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입국 규제 유예가 아니라 출국 유예를 해야 설득력이 있고,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류자격 부여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미등록자 백신 독려는 합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 당국의 이주민 방역 현실에 대한 무지와 안일함은 백신 접종률 통계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방역당국이 말하는 백신 접종률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이주민들이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코로나 발생 초기 공적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의 소외, 재난지원금 차별 등을 가져왔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은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을 안고 요구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거나 경제 활성화 우선순위를 부르짖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늦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에 의한 이주민 차별이 수시로 불거졌던 현실을 바로잡고, 차별로 인해 불거졌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 8. 홈리스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방역조치 : 안형진(홈리스행동)

코로나 시기 내내 홈리스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염병 상황에서 적정 주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 사형선고”라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서비스가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고용, 주거, 급식 등 노숙인복지법이 명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가운데 제대로 작동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홈리스

스는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고, 소득을 구할 일자리가 없었고, 방역수칙 이행이 가능한 주거가 없었으며, 안전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이런 복지의 공백 속에 홈리스들은 차별과 혐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언론은 왜 잠 잘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가를 따져 물으며 거리홈리스를 잠재적 감염원으로 취급하였고, 기초지자체와 철도역은 홈리스의 물품에 '폐기물' 딱지, '철도안전법 위반' 딱지를 붙여가며 주기적으로 쓸어가거나 압수하였고, 방역을 빌미로 한 온갖 유형의 폭력과 강제퇴거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노숙인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집합적인 서비스로 접철된, 그렇기에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설복지만을 지속 고집해왔을 뿐이다. 누구나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집단밀집시설이 마치 적절하고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홈리스에게 제시됐다. 결국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은 거리홈리스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졌다. 올해 초 '한파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서울역 노숙인시설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인해 100명이 넘는 거리홈리스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이 사태에 단 한번도 책임을 진 일이 없다.

명백한 정책 실패는 엉뚱하게도 홈리스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방역조치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1월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숙인 지원기관 방문자에게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식사 한 끼를 위해서건 병원에 가기 위해서건 복지사를 만나기 위해서건 노숙인 지원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거리홈리스는 일주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당연히 홈리스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만난 거리홈리스는 수심장에 달하는 검사의뢰서와 음성확인서를 "올해의 역사"라며 들이밀었다. 차별과 폭력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의 말은 전연 옳은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홈리스에게 신속하고 엄격한 개별 방역조치를 요구했지만, 정작 홈리스 당사자들을 감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홈리스의 현실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백신접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묵살됐고, 결국 지자체의 역할로 떠넘겨졌다. 그 결과 전체 거리홈리스 백신접종률은 50%를 밑돌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광역지자체에선 접종계획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저조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방역정책 역시 홈리스를 배제하기란 매한가지였다. 전국민 99%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동안, 거리홈리스의 지원금 신청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올해 국민지원금 시행 과정에서 상위 12%를 포함하니 마니를 두고 차별이네 마네 공방이 오갔지만, 소득 최하위층인 홈리스 앞에 놓인 제도 이용의 장벽은 조금도 철거되지 않았다.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방역이었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홈리스 당사자가 수십 번 코를 찌를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하였나. 감염 위협으로부터의 극빈층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전략이 단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은 있었나. '위드코로나'를 말하기 전에, 코로나 시기 내내 국가로부터 '위드아웃'돼 있던 사람들을 먼저 말해야 한다. 단언컨대 홈리스에게 코로나 19시기는 무정부상태에 다름 아니었다. 홈리스를 위한, 극빈층을 위한, 차별받는 약소자를 위한 대책과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 <덧붙임2>

###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때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 방역의 단계적 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성장을 위해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수많은 질문들이 그저 경제 문제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1년 반의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사회적 안전망,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로 인해 타격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며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일상의 평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 시민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 코로나19를 경험한 확진자와 격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를 보완하고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구체적인 회복과 전환 방향에 대한 언급은 부재한 상황이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상으로의 회복’만 거듭 되풀이한다면, 또 다른 위기와 재난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고, 좀 더 나은 대안과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모두에게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감염에 더욱 취약했던 시설의 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의 노인과 약자, 돌봄 종사자,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거주 형태의 기숙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수용자, 빈곤 계층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던 이들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했고, 그 피해 역시도 컸다. 피해와 위기가 심각했다면, 감염이 확산되는 조건을 바꾸고, 시급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조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장애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는 코호트격리로,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을 때는 현장을 섣다운하는 것으로,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했을 때는 정체성을 감염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이 놓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일상의 조건을 바꾸고,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 밀접, 밀폐)의 집단거주시설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체계 등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사회적 보호의 확대, 상병 수당, 유급휴가 등 아픈 면 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신분과 처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일상에서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2.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최악, 정점, 대유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들은 위기로 치달았다. 감염병의 공포와 위기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인권을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정보수집의 문제, 전자팔찌(안심 밴드)도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가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 없는 일방적인 기본권 제한은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켜 버렸다.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은 오히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말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기재로서 작용하고 있다.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거나,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감염병에 걸리는 것보다 동선과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언론의 지표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여 포상하는 제도, 구상권 청구와 고발 조치, 처벌중심으로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엄벌주의는 오히려 두려움과 차별을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긴급한 시기 제한된 권리는 일상이 회복되어도 원점으로 돌아오기 힘들다. 또 다른 위기가 왔을시 제한과 후퇴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코로나19 회복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후퇴 시킨 권리들을 회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염병=범죄화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넘어서야 할 문제이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을 만들어갈 때에만 우리 모두 안전해질 수 있다.

## 3.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이 차별과 불평등을 향해서는 안 된다.

위드코로나의 전제조건은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성인은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법이 시행되지만, 설 수 없는 조건 놓여있거나, 생계가 위협당하는 이들, 미등록 노동자 등 신분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백신접종 뿐 아니라 일상의 건강,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들이 될 수 있고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처해있는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이유로 한 인센티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이유로 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격차는 본질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 먼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의 제재적 정책은 그 자체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금지되어야 한다. 가령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백신 접종여부를 근거로 한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수혜적 조치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 참여 등이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제공된다면, 이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는 모두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의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드코로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스터 샷 도입에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 효과성이 엄밀하게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내에 부스터 샷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백신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부스터 샷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부스터 샷의 도입 이전 코로나 19를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4.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는 거리두기, 집합 인원수 완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는 개인에게 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드코로나를 실험,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코로나19는 지금보다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

사망자의 비율 등이 전체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의 입장에서 사망과 건강의 위험은 오롯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망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공공의료체계의 지원 범위 축소 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경증환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에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적시에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현재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가 위드코로나를 명목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백신 접종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뒤에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비전형 노동자 등을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제도 역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5.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 우리는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길은 생명과 안전, 인간 존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동의 경험이자 재난이다. 하지만 엄벌주의, 차별과 혐오 문제는 재난을 특정 개인의 문제로 귀결시켜버렸다. 재난을 개인화 시킬 때 재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위드코로나로 회복되어야 하는 일상은 방역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무관용 원칙 등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식의 정책 운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보상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그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성 회복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드코로나가 표방하는 일상의 회복에는 인권침해를 야기한 현재의 법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개선도 필요하다. 처벌 중심의 감염병 대응 법제, 감시와 추적을 일상화 한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과 남용, 차별적인 행정명령, 불충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등 지적되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는 지금과 또 다른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백신미접종자, 기존에 만연해 왔던 특정 집단, 혹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또 다른 대책으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하기에 위드코로나 정책은 인권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일상을 회복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적으로 발표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5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